

대구 2·28민주운동 50주년의 역사적 의의와 TK지역주의 극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에 붙여

글 · 류진춘 jcryu@knu.ac.kr

지난 연말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궤도수정 문제로 2010년 정부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되는 혼란스러운 정국속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법안이 12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2·28세대가 아닌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표로서 동법의 개정과 2·28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만큼 개정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해마지 않는다.

사실 50년 전에 일어난 2·28대구학생의거는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이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2·28학생의거는 동개정법 제안 이유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과거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3·15마산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건국이후 자발적 민주화운동의 효시' 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민주화운동의 정의(제2조)는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만 명시했을 뿐 시행령에서조차도 2·28의거는 빠져있어 2·28관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법적으로 그 정당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로부터의 관심도 서서히 묻혀져 왔다.

물론 동법률의 개정을 위한 시도는 17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2·28학생의거에 동참한 바 있는 이해봉 의원이 2007년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여당 홍미영 의원의 법안내용과의 다툼으로 입법이 무산된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이해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이 빛을 보게 되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기념사업회 사무실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셋방살이로 전전하던 2·28회원들은 물론이요 대구시민들이 염원하던 기념관

건립의 재정적 지원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의 자긍심도 늦게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2·28 민주운동이 그동안 왜 우리 사회에서 묻혀 있었으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사회에서조차 그 정체성이 훼손되고 잊혀져 왔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시점에서 짚어 보아야 할 것 같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2·28의거 제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28대구민주화운동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 라고 선언하는 기념축사를 통해 2·28의거의 역사적 의의와 의거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입법과정에서 당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무얼 하였으며 기념사업회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당시의 시장, 지사 또한 별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실 역대 대구시장들은 2·28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념사업회 사업에 대한 시정의 지원규모는 밝히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였다.

2·28기념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억의 기념사업 예산지원을 약속하면서 우선 118억을 지원한 바 있다. 국민의 혈세인 지원금을 당시의 대구시청은 중앙초등학교 옛터에 청소년공원을 조성하는데 투입하고 말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적정 용도로의 집행여부가 문제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으며 예산지원도 끊기게 되었다고 들었다.

2·28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써야 할 소중한 국가예산 집행과정에 2·28 기념사업회는 속수무책으로 응대했다고 하면 심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물가와 예산으로도 기념관 건립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2·28 청소년 중앙공원으로 공원명칭이 낙착되기까지 시민사회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그나마 2·28기념사업 예산으로 조성된 2·28공원의 지하주차장 관리권이라도 야무지게 받아냈더라면 기념사업회 사업활동의 물적 토대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그 동안의 경과야 어찌되었든 2010년 2월 28일은 2·28의거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당대의 주인공인 2·28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가 염원하던 민주화운동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기념식도 가능하게 되었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삽질도 가능하게 되어 모처럼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다.

필자가 2·28기념 사업회 대표로 기용된 것은 2·28세대가 이미 60대 중후반에 접어들어 시민사회적 에너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념사업회 집행부의 세대교체로 활력있는 사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먼저 기념사업회의 이러한 상황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활발한 기념사업 전개를 통하여 기념사업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지원조례 제정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그리고 2·28기념관 건립 등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2·28대구 민주운동조례 제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의장단과 분과위원장 그리고 기념사업회 공동의장인 시장, 정무부시장 및 관련 국과장을 움직여서 2·28의거 이후 46년 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사실 4·19나 5·18기념재단은 말할 것도 없고 마산 3·15의거나 부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일찍부터 자치단체 지원 조례를 통하여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8기념사업회는 그 동안 대구시청으로 부터도 찬밥신세였다. 조례 제정에는 이해봉 의원의 지역구인 달서구 출신의 최문찬 시의원 (현 시의회 의장) 의 도움이 컸으며 2006년 조례제정을 통하여 2·28회원과 시민사회가 2·28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얻은 동력을 통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과 기념관 건립 등 2·28회원과 대구시민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의욕적인 사무국 요원 충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이 요구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합세웅 이사장을 2·28 제47주년 기념식에 내빈으로 축사를 요청하고 유영표 부이사장, 문국주 전 상임이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예산지원으로 40대의 유능한 시민운동가인 김현철씨를 사무국장으로 영입하는 가운데 2·28기념관 건립문제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뛰어다닌 기억이 새롭다.

대구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몇차례나 만나 협의하기도 했으며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 한범덕 차관을 면담(2007.8.2)하는 가운데 국회 원혜영 예결위원장도 요청하여 행자부 강병규 지방행정본부장, 박병규 정무부시장, 문국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와 기념관 건립을 위한 협의회의(2007.8.27)를 여는 등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또 법개정을 위하여 이해봉 의원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홍미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이해봉 의원이 발의한 법의 병합심의 내지는 절충발의를 위하여 김부겸 의원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2008년 들어서는 기념관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한승수 국무총리, 그리고 2·28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에 청원을 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2·28기념관 건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단순히 과거 50년전의 2.28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아닌 대구경북지역의 청소년, 시민들의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와 공간구성을 계획했다.

과거 2·28관련 포럼이나 심포지엄에서 2·28정신이 시민사회의 의식속에서 망각되어가고 역사속에 화석화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는 등 2·28기념사업회가 젊어지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되기를 염원했던 한 사람이자 기념사업회 의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몇마디 충언을 드리고 싶다.

2·28기념관 건립은 50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2·28학생의거를 단순히 기억, 기념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을 하지는 것이 아니다. 50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하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높이 치켜든 의로운 횃불이 3·15와 4·19혁명으로 승화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의미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우고 민주주의의 산 역사가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사랑을 받는 2.28기념사업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2·28기념사업회의 근간 세력인 2·28세대 즉 2·28회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 나서는 심기 일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사실 대구경북은 90년대 초 이래 정치사회적으로 소중양주의적 패권의식이 깨지면서 배타적이고 퇴영적인 보수정서가 시민들의 의식속에 내재화된 TK지역주의 정서에 함몰되었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왕따당하는 고립적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강한 무력감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지역총생산이 거의 20년 가까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이와 같은 전근대적 연고주의 의식과 ‘못 먹어도 고(GO)’ 하는 퇴영적 시민의식에 찌든 TK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시민사회의 침체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50년 전 서슬퍼런 이승만 독재체제하에 민초들이 숨죽여 엎드려 있던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분연히 일어나 교정을 박차고 나와 민주주의의 횃불을 치켜들었던 그 의로운 정열을 다시 한번 불태워야 할 것이다.

원래 대구경북지역은 동학이 창도되고 어느 지역보다 의병운동이 활발했으며 100년 전 일제의 경제침탈에 맞서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역동성을 가진 지역이다.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가운데 대구경북사회가 한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21세기를 기대하며 2·28의거 50주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글 류진춘 | 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의장, 경북대학교 교수